

경제주평

■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해외

- ①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
- ② 신냉전 시대의 도래
- ③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 ④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 ⑤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

국내

- ①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
- ②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
- ③ 막 올린 ESG 경영
- ④ RENEW 남북경협

목 차

■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21년 하반기 해외 경제 이슈	2
3.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11
4. 시사점	19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오 준 범 연 구 위 원 (2072-6247, jboh19@hri.co.kr) 외 3명

Executive Summary

□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 개 요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상존하는 경기 불확실성 및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상·하방 요인 등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를 선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

이슈 제목		선정 배경
해 외	①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	- 향후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 방역환경 차이 등에 따라 국가·지역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더욱 확대
	② 신냉전 시대의 도래	-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화, 장기화됨에 따라 미·중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
	③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 불안정성 확대 우려
	④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 최근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장기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
	⑤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	-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에서 혁신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기술 적응도도 더욱 빨리지는 모습
국 내	①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	- 최근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별, 연령별, 내수·수출산업간 차별화는 심화
	②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	-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가 급증하면서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③ 막 올린 ESG 경영	-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가 확대되고 ESG 경영 확산이 가속화
	④ RENEW 남북경협	- 남북경협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가운데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국제사회의 지지, 국민적 공감대, 경험제도화, 민간 주체들의 적극성이 필요

■ 2021년 하반기 해외 경제 이슈

①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

국가간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의 방역환경 차이에 따라 향후 국가간 경제성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등으로 경제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요 글로벌 경기선행지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 세계 국가·지역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접종률이 낮은 국가 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및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방역 여건 등을 기반으로 경기회복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국가간 성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② 신냉전 시대의 도래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화, 장기화됨에 따라 미·중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양국은 2020년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며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어 양국 사이의 견제와 충돌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양국간 마찰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기술, 산업, 환경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분야간 갈등 양상이 연결되고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은 경기 불확실성 확대 및 양자택일 압력 등의 경기 하방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③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최근 미국 등 주요국 경기 개선세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예상보다 빠른 긴축 정책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반기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신흥국 내 글로벌 유동성 이탈로 인한 자산시장 불안정성 확대가 우려된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백신 도입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며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3월 0.50%에서 2021년 5월 2.54%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4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빠른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자산매입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예상보다 빠른 긴축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신흥국 내 글로벌 자금이탈로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었던 과거의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

④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 장기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재진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및 경기 회복 기대감 강화 등이 원자

재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19세기 말 산업화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오일쇼크 이후 등 과거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장기적이면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수요가 높은 금속 등 일부 원자재는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미국의 세일오일 생산 재개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 등이 원자재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원자재 가격의 장기 상승 추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⑤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신기술의 혁신 속도는 물론 사람들의 신기술 적용 속도도 더욱 빨리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온라인쇼핑,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원격 업무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를 포괄한다. 실제로 원격 근무와 회의가 증가하면서 원격 화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Zoom의 경우 2021년 1월 고객사 수가 46.7만 명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약 4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에 대한 적용 속도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적용 속도가 현저히 빨라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맥킨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 근무, 온라인 쇼핑, 첨단기술 사용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적용 속도는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평균 551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로나 위기 이후 실제 적용 속도는 평균 23.3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①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

최근 투자 및 수출 회복과 이에 따른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별, 연령별, 내수·수출산업간 차별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설비투자와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행지표도 호조세를 보여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기선행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경기 이후행하는 노동시장도 코로나 충격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한편 경기 회복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소득별, 연령별, 내수·수출산업간 차별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수준별 경기 전망에서 고소득층의 경기 전망이 양호한 반면, 저소득층은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경기 회복 체감도에서 차별화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산업 경기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내수와 외수(수출) 기업 간 개선 정도는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②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부채가 급증해 채무 부담 및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였으며, 한국 또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신용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및 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화 위험도 커지고 있다. 향후,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

한 대응을 위한 연금 및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역시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채무상환여력 약화 및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향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③ 막 올린 ESG 경영

전 세계적으로 ESG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정부 및 기업의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장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ESG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표준화 움직임도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 또한 ESG 경영과 관련하여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산업부에서는 국내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형 ESG 평가 지표 정립을 추진 중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는데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ESG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투자자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용등급평가에서도 ESG가 고려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④ RENEW 남북경협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남북 대화와 관여 및 협력에 기초한 일부 남북경협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경협 재개를 통해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견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국민적 공감대 확산, 경험 제도화 진전, 민간 추진 주체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평화경제의 대표적 모델로 손꼽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기추진 사업을 우선 재개하여 상호공존과 공동번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시사점

2021년 하반기에 부각되거나,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이슈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필요하다. **첫째**, 하반기 경기 반등 지속을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 및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하반기 수출 개선 지속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청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본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잘 활용함은 물론 미국,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등 기추진 사업 우선 재개에 힘쓰는 한편 단계적 경험 확대를 통해 평화경제 모델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1. 개요

○ 대내외적으로 상존하는 경기 불확실성 및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상·하방 요인 등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를 선정 및 정리

- 국내 및 해외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9가지를 선정

- 해외 부문에서는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 「신냉전 시대의 도래」,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 등을 선정함
- 국내 부문에서는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 「막 올린 ESG 경영」, 「RENEW 남북경협」을 선정함

<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

이슈 제목		선정 배경
해외	①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	- 향후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우세하지만, 코로나19 방역환경 차이 등에 따라 국가·지역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더욱 확대
	② 신냉전 시대의 도래	-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화, 장기화됨에 따라 미·중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
	③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자산시장 불안정성 확대 우려
	④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 최근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장기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
	⑤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	-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에서 혁신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기술 적용도도 더욱 빨리지는 모습
국내	①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	- 최근 국내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으나, 소득별, 연령별, 내수·수출산업간 차별화는 심화
	②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	-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 부채가 급증하면서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③ 막 올린 ESG 경영	-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가 확대되고 ESG 경영 확산이 가속화
	④ RENEW 남북경협	- 남북경협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레 제기되는 가운데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국제사회의 지지, 국민적 공감대, 경협 제도화, 민간 주체들의 적극성이 필요

2. 2021년 하반기 해외 경제 이슈

①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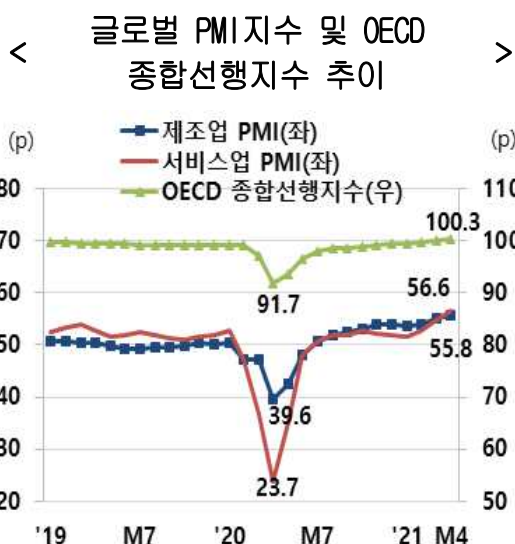
○ 향후 글로벌 경기 전반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 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연

- 세계 주요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등으로 경제 심리가 개선되며 향후 글로벌 경기 상승세가 전망

- 글로벌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지수는 기준점인 50p를 넘기며 향후 경기
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
- OECD 종합선행지수 또한 2021년 3월 이후 100p 이상을 유지하며 향후 경
기가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 2021년 3월 인도 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5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음
- 이에 강력한 봉쇄조치가 재논의되고 경제 활동 차질 및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경기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 점증



자료 : Bloomberg,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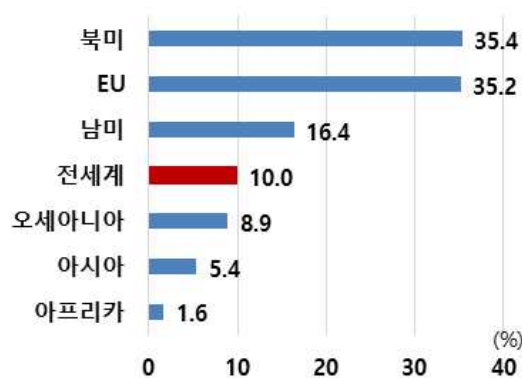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Johns Hopkins.

○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 차이 등에 따라 전 세계 국가·지역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국가·지역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접종률이 낮은 국가 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및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
 - 5월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1회 이상)은 백신 개발 및 유통에 우위를 가진 북미, EU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음
 - 또한 연말까지 계획된 백신 조달 비율은 G20 내 선진국 125.7%, 非G20 신흥국 16.5%, 저소득 개도국 5.1%로 추산됨¹⁾
 - 즉,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올해 말까지도 백신 접종률이 낮아 여전히 코로나19²⁾ 경제 충격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방역 여건 등을 기반으로 국가간 경기회복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성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일찍 방역에 성공한 중국, 신속한 백신 대량 공급이 이루어진 미국 등이 빠른 경기 회복세를 이어나가며 글로벌 경기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
 - IMF는 저성장을 지속해온 선진국 경제가 2021년 5.1%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해온 신흥국이 6.7%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지역별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구 비율 >



자료 : Our World in Data(ourworldindata.org).
주 : 5월 24일 기준.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17	'18	'19	'20	'21	'22
전세계	3.8	3.6	2.8	-3.3	6.0	4.4
선진국	2.5	2.3	1.6	-4.7	5.1	3.6
미국	2.3	3.0	2.2	-3.5	6.4	3.5
유로존	2.6	1.9	1.3	-6.6	4.4	3.8
영국	1.7	1.3	1.4	-9.9	5.3	5.1
신흥국	4.8	4.5	3.6	-2.2	6.7	5.0
인도	6.8	6.5	4.0	-8.0	12.5	6.9
아세안	5.5	5.3	4.8	-3.4	4.9	6.1
브라질	1.3	1.8	1.4	-4.1	3.7	2.6

자료 : IMF('21.4월).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1.4월).

② 신냉전 시대의 도래

○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화, 장기화됨에 따라 미·중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 미·중 양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력,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마찰을 빚고 양국간 갈등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미·중 양국은 2020년 코로나발 경제 충격으로부터 가장 빠르게 회복하며 글로벌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어 양국간의 견제와 충돌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
- 특히 최근 양국간 마찰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기술, 산업, 환경 전반에 걸쳐 발생하며 갈등 분야가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양국 갈등이 증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중간 전방위적 충돌이 지속되고 무역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미국 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은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일부 반사이익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불확실성 확대 및 양자택일 압력 등이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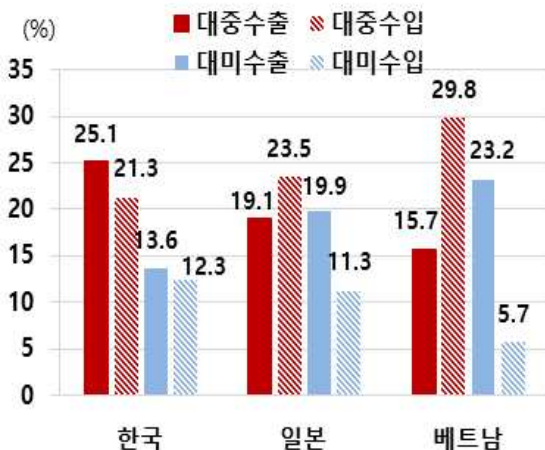
※ 한국, 일본, 베트남의 대중, 대미 교역은 각국 총 교역의 1/3 이상을 차지

< 최근 분야별 미·중간 갈등 주요 쟁점 >

분야	최근 주요 쟁점
정치	- 대만, 홍콩, 신장지역 등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반발
안보	- 미국은 인도, 일본, 호주와의 안보협력체 쿼드(Quad)를 통해 대중 견제 전개
기술	- 희토류,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양국간의 견제와 역량강화 경쟁 심화
산업	-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기조(미국 '바이아메리칸', 중국 '쌍순환 전략' 등)로 인한 충돌 지속
통상	- 양국은 자국 중심, 우방국 위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진
환경	-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개발 등 관련 경쟁 지속

자료 : 정부 발표 자료 및 언론자료 종합.

< 한국·일본·베트남의 對中·對美 교역 비중 >



자료 : UN Comtrade.

주 : 2019년 기준.

③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 미국 등 주요국 경기 개선세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이 대두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 정부는 대규모 완화 정책을 통하여 시장 내 유동성 과잉공급

- 2020년 1월~2021년 3월까지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추가적인 재정지출 규모는 총 9조 9,30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9.2% 수준
- 동 기간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지원 규모는 6조 1,040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6.1% 수준

-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등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며 인플레이션 발생 및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전환 가능성이 대두

-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020년 3월 0.50%로 급락한 후 유동성 확대 및 경기 개선 등으로 2021년 5월 2.54%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4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빠른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자산매입 속도 조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언급됨

< 주요국 코로나19 관련 추가 재정지출 및 유동성 지원 규모 >
(억 달러)

	추가재정지출	유동성 지원
전 세계	99,300 (9.2%)	61,040 (6.1%)
미국	53,280 (25.5%)	5,100 (2.4%)
일본	8,010 (15.9%)	14,290 (28.3%)
중국	7,110 (4.8%)	1,930 (1.3%)
영국	4,400 (16.2%)	4,370 (16.1%)
독일	4,190 (11.0%)	10,570 (27.8%)
한국	730 (4.5%)	1,660 (10.2%)

<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을 추이 >



자료 : IMF Fiscal Monitor('21년 4월).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주1) 괄호 안은 각국의 2020년 GDP 대비 비중.

2)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년 1월~'21년 3월 17일까지의 각국 발표내용 기반 추산.

○ 하반기 미국 양적완화 축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신흥국 내 글로벌 유동성 이탈로 인한 자산시장 불안정성 확대 우려

- 과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 직후 글로벌 자산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발생

- 2013년 5월 벤 버냉키 전 미연준 의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채권 매입 프로그램 종료를 시사하는 발언 직후 미국 달러 및 채권금리가 급등, 신흥국 내 대규모 자본 이탈이 일어나며 글로벌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
- ※ 2013년 5~6월간 신흥국 주가지수는 16.8%, 통화지수는 5.6% 하락

- 미국 내 자산매입 축소 정상화 논의 시기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여 신흥국 내 글로벌 자금이탈로 인한 글로벌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 우려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 내 대거 유입되어 있어 예상보다 빠른 긴축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의 긴축발작이 재현될 우려
- 특히 각국의 대규모 재정지출 및 저금리 기조로 급증한 정부 및 민간부채로 인해 글로벌 자산시장 충격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19년 103.8%에서 2020년 120.1%로 증가, 신흥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19년 54.7%에서 2020년 64.4%로 증가

< 2013년 신흥국 주가 및 통화지수 추이 >



자료 : Bloomberg.

< 선진국 및 신흥국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



자료 : IMF Fiscal Monitor('21년 4월).

④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 진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장기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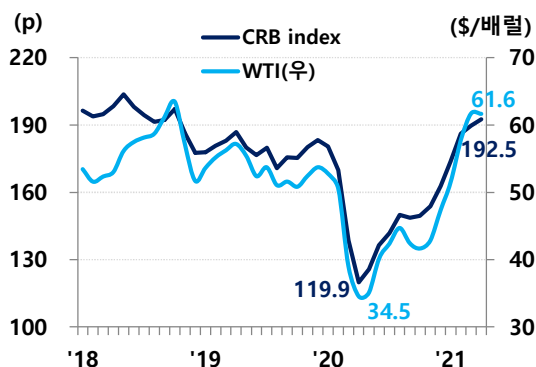
- 최근 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원자재 슈퍼사이클²⁾ 재진입 논란이 제기

- 2020년 4월중 106.3p까지 급락했던 CRB지수³⁾는 2021년 5월중 208.0p까지 상승, 국제유가(WTI)는 배럴당 31.0달러까지 하락했다 최근 66.1달러까지 상승
- 철광석, 구리 가격 등이 2010년대 초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식량가격 또한 최근 급등으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를 지속하여 최근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서면서 슈퍼사이클 진입 논란이 제기

-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및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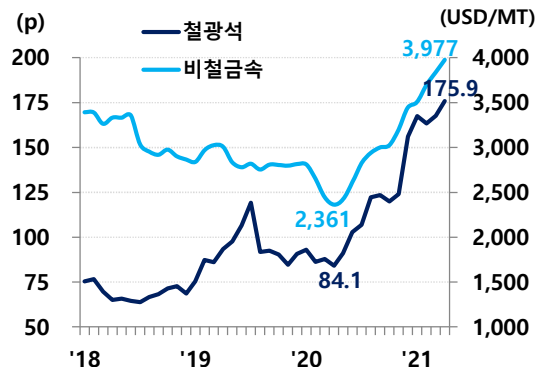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
- 또한 세계 주요국의 경기 회복 및 중국의 수요 증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 영향,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강화 등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됨

< CRB지수 및 WTI 가격 추이 >



자료 : Bloomberg.

< 철광석 및 비철금속 가격 추이 >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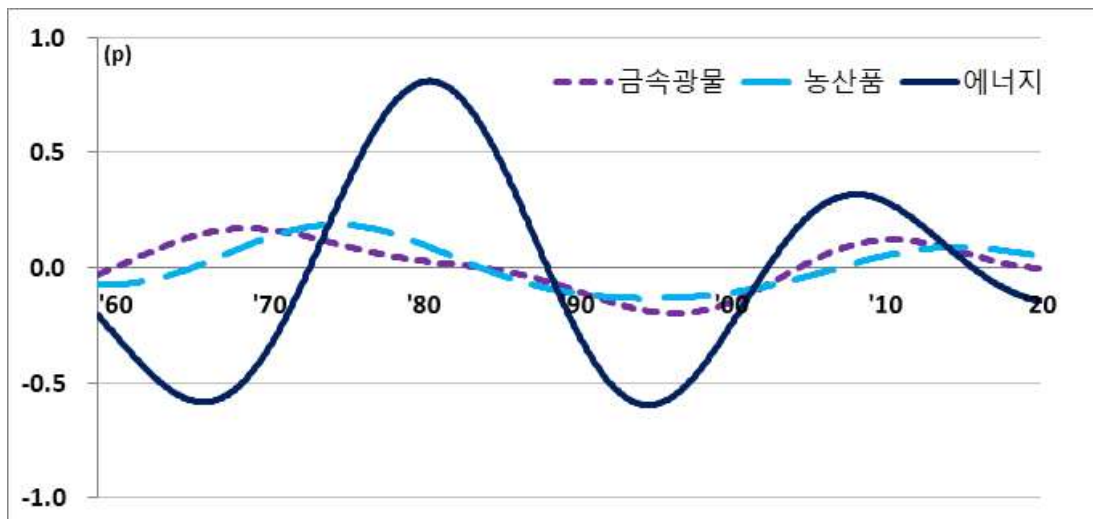
2)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란 통상적으로 국제유가, 금속, 농산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년 이상 장기 상승하는 추세를 의미.

3) CRB지수는 곡물, 원유, 금속, 귀금속 등의 주요 19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지수.

- 과거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경우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장기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
 - 과거 글로벌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19세기 말 산업화 진전에 따른 장기 상승,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재건에 따른 장기 상승이 있었음
 - 1970년대 오일쇼크로 시작된 장기 상승, 2000년대 들어 중국 등 신흥국의 고속 성장에 따른 장기 상승 등이 있음
 - 현재 원자재의 슈퍼 사이클은 에너지의 경우 저점 근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나, 농산품 및 금속광물은 여전히 하락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 향후 친환경 투자 확대 지속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상존하나, 통화정책 정상화, 셰일오일 생산 재개 등이 장기 상승 추세를 제한할 가능성
 -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친환경 투자로 수요가 높은 금속 등 일부 원자재는 장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존
 - 그러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빠르면 수년 내로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될 경우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자재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
 -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큰 축을 담당하는 에너지 가격은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을 재개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 등으로 향후 기대 수요 또한 제한적일 전망

< 글로벌 원자재 슈퍼사이클 추정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주 : 1) World Bank(1960년 1월~2021년 4월)의 원자재 가격 데이터를 실질화한 후 BP 필터를 이용하여 추정.
- 2) 에너지는 석탄과 원유, 가스를 포함.

⑤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

○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에서 혁신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신기술 적응 속도도 더욱 빨리지는 모습

- 코로나19 영향으로 급격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온라인쇼핑,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원격 업무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를 포괄
 -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유로운 이동 및 집단 모임의 제한, 생활 방식의 변화 등이 진행되면서 관련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
 - 세계경제포럼(WEF)은 코로나19로 발전할 분야로 온라인쇼핑, 비접촉 결제, 원격근무 및 5G 네트워크 등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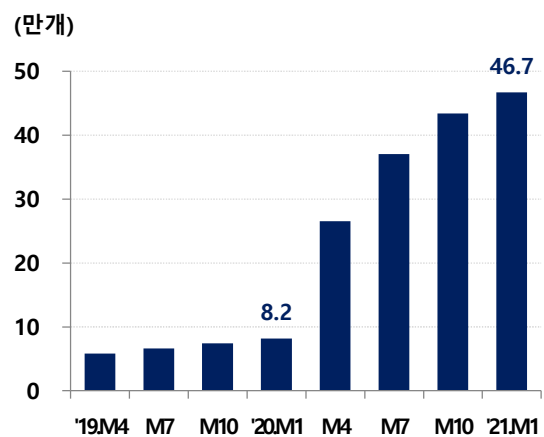
-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비대면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근무·회의·교육, 온라인·모바일 쇼핑 등 비대면 관련 기술과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
 - 원격 화상 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Zoom의 경우 2021년 1월 고객사 수가 46.7만 명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약 470% 증가하였음
 - 비대면 트렌드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코로나19로 발전할 분야 >

	분야
세계 경제 포럼	- 온라인쇼핑, 로봇배달 - 디지털 비접촉 결제 - 원격 근무 및 학습, 진료 -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 밸류체인 4.0 - 3D프린팅 - 로봇과 드론 - 5G 네트워크
포브스	- 클라우드 컴퓨팅 - 인공지능 - 5G 네트워크 - 빅데이터

자료 : WEF, Forbes.

< Zoom 고객사 수 추이 >



자료 : Zoom.
 주 : 해당월 말 기준 고객사(종사자 수 10인 이상) 수.

- 신기술에 대한 적응 속도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적응 속도가 현저히 빨라진 것으로 나타남
 - 맥킨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 근무, 온라인 쇼핑, 첨단기술 사용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적응 속도는 코로나 위기 이전에는 평균 551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함
 - 코로나 위기 이후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데 실제로는 평균 23.3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필요성이 크게 높아진 원격 근무는 해당 기술 적응 속도가 예상 속도에 비해 약 43배 빨라짐

- 다만 코로나 충격 이후 글로벌 벤처 투자액은 증가했으나,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OECD(2021)에 따르면 코로나 충격으로 연구 활동의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Ipsos Mori(2020)에서도 전체 벤처 투자액은 위기 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벤처 투자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음
 - 최근 수요가 급등한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간 성장 격차가 발생할 우려

< 기술에 대한 적응 속도 변화 >

(단위: 일, 배)

	예상(A)	실제(B)	(B)/(A)
원격 근무	454	10.5	43
온라인 쇼핑	585	21.9	27
고급 운영기술 사용	672	26.5	25
의사결정에서 첨단기술 사용	635	25.4	25
고객 니즈 및 기대 변화	511	21.3	24
클라우드로 자산 이동 증가	547	23.2	24
고객 배송의 소유권 변경	573	24.4	23
니어쇼어링, 인소싱 관행 개선	547	26.6	21
데이터보안에 대한 지출 증가	449	23.6	19
공급망 중복 구축	537	29.6	18

자료 : McKinsey & Company.

3.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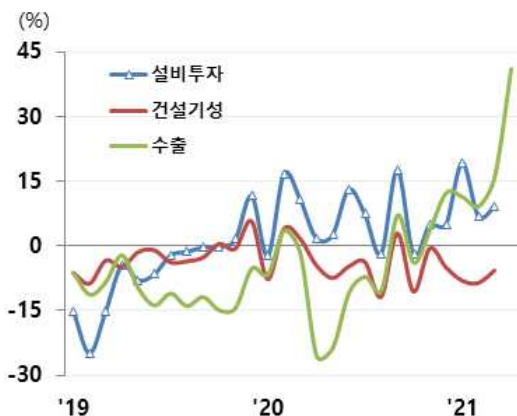
①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

○ 최근 투자 및 수출 회복과 이에 따른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

- 최근 설비투자과 수출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 설비투자는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한 이후 강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021년 1분기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플러스를 보여 향후에도 개선세 지속이 예상됨
 - 2020년 부진했던 건설기성도 최근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2021년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수출 역시 2020년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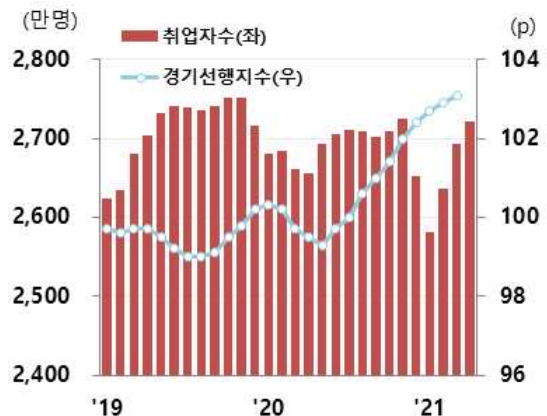
- 경기선행지수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경기에 후행하는 노동시장도 코로나 충격 이전 수준에 근접
 - 경기선행지수가 2020년 7월 이후 기준점인 100p를 넘어 2021년 3월 현재 103.1p를 기록하고 있음
 -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자수가 2021년 1월을 저점으로 최근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남

< 투자 및 수출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 1) 건설기성은 불변기준.
 2) 2021년 2~3월 설비투자 및 건설기성은 잠정치 기준.

< 경기선행지수 및 취업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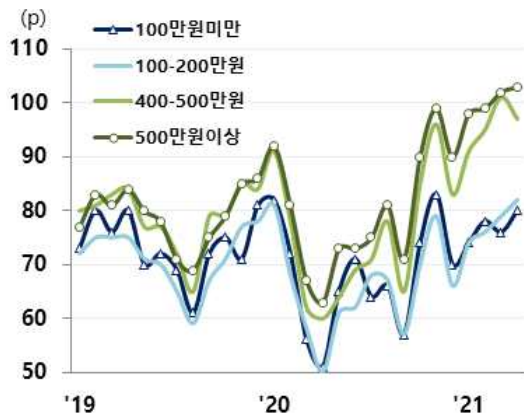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 : 2021년 1~3월 경기선행지수는 잠정치 기준.

○ 경기 회복이 진행되에도 불구하고 소득별, 연령별, 내수·수출산업간 차별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소득 수준별 경기 전망에서 고소득층의 경기 전망이 양호한 반면, 저소득층은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경기 회복 체감도가 차별화
 - 월소득 500만원이상 고소득층의 경기 전망CSI는 2021년 4월 103.0p를 기록하여 코로나 충격 이전 수준을 상회함
 - 반면 100만원미만 저소득층은 80.0p를 기록하여 코로나 충격 이전 수준을 하회함에 따라 소득별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임
 - 또한 백신 접종 진행이 지연되면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에도 경기 회복 체감이 차별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층 고용 회복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디기 진행되면서 청년층의 경기 불황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기업 측면에서는 모든 산업에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내수와 수출 기업 간 개선 정도는 차별화 발생 가능성 존재
 - 수출 제조업의 업황 전망BSI는 2021년 6월 97p를 기록한 반면, 내수 제조업은 89p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또한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81p로 나타나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이, 수출보다는 내수 기업의 업황 전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임

< 소득수준별 경기 전망CSI >



자료 : 한국은행
 주 : 소득수준 200~400만의 통계는 그래프의 시인성을 위해 생략.

< 산업별 업황 전망BSI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계산.

②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

○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가 급증해 채무 부담 및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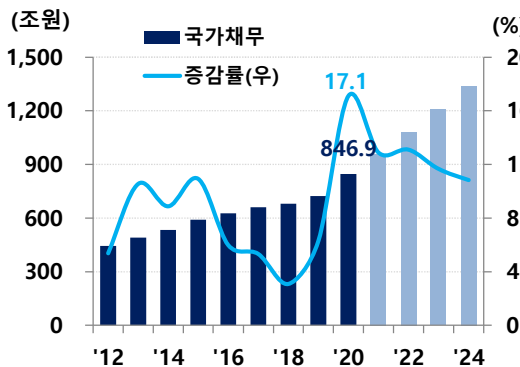
-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도 큰 폭으로 증가**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였으며, 한국 또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 대출이 크게 증가
- 한국 또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2020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7.1% 증가한 846.9조 원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
-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과 증가속도는 양호한 수준이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가계·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신용이 가파르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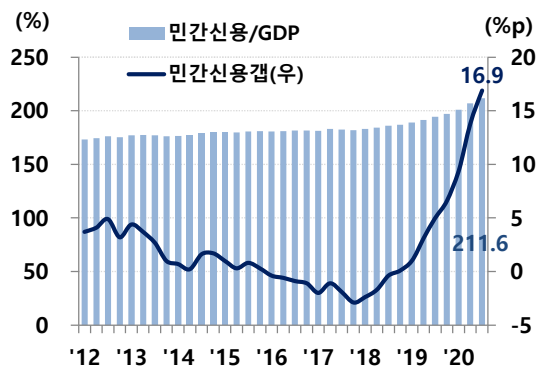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020년 4분기 197%에서 2020년 3분기 212% 수준으로 증가함
- 특히 동기간 민간부문 신용갭(Credit-to-GDP)⁴⁾은 6.6%p에서 16.9%p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분기 13.8%p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p를 넘어선 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함

< 국가채무 규모 및 추이 >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20년은 4차 추경 기준, '21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22년 이후는 전망.

< 민간신용 추이 >



자료 : BIS.

4) 민간신용은 비금융기업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 신용 합계이며, 민간부문 신용갭(Credit-to-GDP gap)은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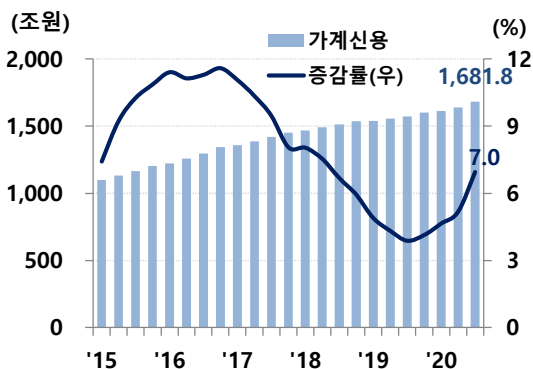
- 민간 부문의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및 상환 능력이 악화되어 향후 부실 위험이 증대

-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자리 및 소득 감소, 주식 등 투자수요 확대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주택시장 불안정 등으로 주택관련 대출도 크게 증가하며 2020년 4분기 가계신용은 1,726.1조 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
- 이에 따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0년말 175.5%로 전년동기 대비 13.2%p 상승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이 큰 폭으로 악화
-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실적은 부진한 반면 부채는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

-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여력이 약화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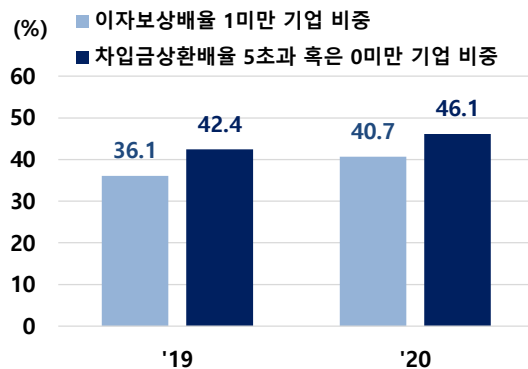
- 가계부채 규모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향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좀비기업과 폐업 위기 자영업자 등이 정부의 지원 정책 등으로 원리금과 이자비용 상환이 유예되었으나, 채무상환능력은 악화되면서 부실 위험은 높아짐
-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향후 연금 및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될 우려

< 가계신용 규모 및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기업 채무상환능력 변화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회의 보도자료.

주1)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이 자지급능력을 평가.

주2) 차입금상환배율(차입금/EBITDA)은 원금상환능력을 평가.

③ 막 올린 ESG 경영

○ 전세계적으로 ESG가 핵심 화두로 부상하면서 한국에서도 정부 및 기업의 ESG 관련 의무 강화 및 투자가 확대되고 관련 경영 확산이 가속화

- 지속가능성장 및 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핵심 화두로 부상하고, ESG의 규제화 및 표준화가 추진⁵⁾

- 지속가능경영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기관 및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부상
-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표준화 움직임도 가속

- 한국 또한 ESG 경영과 관련하여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

- 한국 또한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의 ESG 활동내역 공시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
- 산업부는 공신력 있는 ESG 평가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존 국내외 지표와 호환성이 높으면서 국내 경영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형 지표 정립 추진

< K-ESG 지표(안) >

분류		세부내용	분류		세부내용	
정보 공시	정보공시	지속가능경영 정보공개방식, 사업장 범위, 목표	환경	환경경영 정책	환경정책 및 조직,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책임 경영 정책		사회책임경영 전략 및 목표 등	환경경영 성과	친환경 비즈니스, 폐기물 배출량·재활용률 등
사회	임직원	임직원 다양성, 채용 등		환경경영 검증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등	
	인적자원관리	임직원 교육, 역량 개발 등		법규준수	환경 법규 위반	
	근로환경	사업장 안전관련 사항 등		지배구조	이사회	이사회 다양성, 활동 등
	인권	인권정책, 교육 등			주주	주주권리, 배당 등
	협력사	공급망, 동반성장 관련 성과 등			소유구조	소유구조 등
	지역사회	지역사회 사회공헌 참여 및 활동 등			윤리경영 및 반부패	윤리경영 및 반부패, 준법 현황 등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			감사	감사기구 관련 등
	법규준수	사회 부문 법규 위반			법규준수	지배구조 법규 위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5) ESG란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용어이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넘어 사회 및 환경 분야로 확대된 개념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

- 국내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도 ESG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ESG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
 - 국내에서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위원회 설립, ESG 채권 발행 및 임원 평가에 ESG 항목 반영, 친환경 사업구조로 전환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
 - 원화 채권시장 내 ESG 채권 신규 발행 증가, 은행들의 ESG 기준 적용 대출 금리 우대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ESG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짐

- 향후 투자자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용등급평가에서도 ESG가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ESG 평가와 국가신용등급 평가는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명시
 - 향후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용등급평가 과정에서도 ESG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국내 기업 및 국가 차원에서 ESG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ESG 관련 글로벌 규제 및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무디스 국가별 ESG 신용영향점수(CIS)⁶⁾ >

등급	국가	총계
CIS-1 긍정적 (Positive)	[선진국] 한국,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 맨섬, 오스트리아 (11개국) [신흥국] (0개국)	11개국
CIS-2 중립적 (Neutral-to-Low)	[선진국]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스페인, 핀란드, 홍콩 등 (20개국) [신흥국]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버뮤다, 불가리아, 우루과이, 크로아티아, 폴란드 등 (10개국)	30개국
CIS-3 다소 부정적 (Moderately Negative)	[선진국] 일본, 그리스, 몰타,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 (6개국) [신흥국] 중국,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칠레, 쿠웨이트, 태국 등 (32개국)	38개국
CIS-4 부정적 (Highly Negative)	[선진국] (0개국) [신흥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스리랑카, 이집트, 인도, 캄보디아, 쿠바, 터키 등 (45개국)	45개국
CIS-5 매우 부정적 (Very Highly Negative)	[선진국] (0개국) [신흥국] 라오스, 레바논, 베네수엘라, 수리남, 아르헨티나, 이라크, 잠비아 등 (20개국)	20개국

자료 : 기획재정부.

6)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전세계적으로 ESG가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2021년 1월 전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각 분야별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별로 관련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하였으며, 한국은 ESG 관련 요소들이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등급으로 평가됨.

④ RENEW 남북경협

- 한미정상회담에서 2018년 남북 및 북미 간 합의에 기초해 대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일부 남북경협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제기
 - 한미 정상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공동성명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남북 대화와 관여 및 협력에 기초한 일부 남북경협 재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을 제시
 - 정부의 평화경제론과 북한의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간 정책적 합의점 도출을 통해 경협이 재개될 수 있음
- 남북경협 재개를 통해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국제사회의 지지, 국민적 공감대, 경협 제도화, 민간 주체들의 적극성이 필요
 -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 견지 : 경협 상대방인 북한과 소통하며 상대의 필요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초하여 정책이 추진되어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2018년 「4.27 판문점선언」 과 「9.19 평양공동선언」 은 남북 정상이 상호주의에 입각해 만들어낸 정책 성과로 이를 현실화하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국제사회의 지지(countenancE)와 협력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확대·강화되는 가운데 남북경협 재개를 통한 평화경제 실현의 필요성에 대한 주변국 설득 노력 필요
 - 남북경협 재개는 한반도의 긴장 해소 및 정세 안정을 견인하며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이 평화경제의 직접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장

- 국민적 공감대(National consensus) 형성 : 남북경협 재개가 체감할 수 있는 평화경제 실현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강화
 -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경협 재개를 단계적으로 추진

- 하나의 시장(OnE-market)을 위한 제도화 추진 : 4대 경협 합의서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추진
 -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제도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민간 추진 주체들의 적극 의지(Willingness) : 정부는 민간의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는 민간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법제적으로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마련

<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과제 : RENEW >

R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 견지
E	국제사회의 지지(CountenancE)와 협력
N	국민적 공감대(National consensus) 형성
E	하나의 시장(OnE-market)을 위한 제도화 추진
W	민간 추진 주체들의 적극 의지(Willingness)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

첫째, 하반기 경기 반등 지속을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 현재 고용 수준 개선세를 유지하면서 투자 확대가 추가적인 고용과 소비로 이어질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요구됨
- 통화정책의 선제적인 움직임 강화, 확장적 재정정책과의 정책 조합 및 유연한 경기 대응 등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함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기업의 생존 지원에 주력하기 위한 기업 대상 보증 대출 규모의 증액 등 유동성 공급을 지속해야 함

둘째, 정부 및 민간부문의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경제 및 사회적 타당성과 필요성에 기초하여 분명한 기준을 세워 예산을 배분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밀하고 엄격한 예산 심의 과정이 필요하며, 생산성이 낮거나 중복적인 지출 등 비효율성 지출을 과감히 축소해야 함
-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더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여, 이에 대응한 새로운 세원 발굴 등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
- 금리 인상 충격이 발생 시 가계부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셋째, 하반기 수출 개선 지속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 하반기 수출 개선 지속을 위한 정부 정책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공조가 요구됨
 -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간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이 요구됨
- 기업은 기존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함
 - 기초 핵심 분야의 소재 및 부품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중간재의 국산화 비중을 확대하는 등 부가가치 중심으로의 수출경쟁력 제고 방향으로의 전환
 - 또한,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에 부합하고 신성장산업에서 선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투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넷째, 청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본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 청년층 장기미취업자 등 고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으로써 경기 충격에 따른 청년 고용 충격을 완화할 필요
-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등 청년층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인적자본 손실을 방지할 필요
-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

다섯째,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잘 활용함은 물론 미국,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등 기추진 사업 우선 재개에 힘쓰는 한편 단계적 경협 확대를 통해 평화경제 모델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HRI**

동향분석팀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오 준 범 연 구 위 원 (2072-6247, jboh19@hri.co.kr)
 신 유 란 선 임 연 구 원 (2072-6240, yooran0111@hri.co.kr)
 류 승 희 연 구 원 (2072-6217, shryu@hri.co.kr)
 통일경제센터 이 해 정 통일경제센터장 (2072-6226, hjlee@hri.co.kr)